

정부의 농어촌 발전대책 내용을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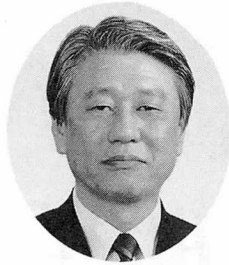
지난 6월 14일 발표한 농어촌발전대책은 UR협상 이래 한국농업의 살 길을 찾고자 대통령직속의 각계 전문가들 30명으로 구성된 농어촌발전위원회에서 4개월간 많은 토론을 거쳐 만들어져 대통령에게 보고한 농정개혁안을 농림수산부가 민자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된 안으로서 농어촌정책의 기본틀이다.

발표된 농정개혁안을 보면 그렇게 많은 토론을 거쳐 만든 농발위안중 가장 중요한 쟁점사항들은 유보되거나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개혁적 차원에서 농업정책의 변화가 있겠는가 하는 의문을 버릴 수 없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물론 이번 농정개혁안은 이제까지 여러 차례 발표됐던 과거 정책과는 달리 기본적 성격에서나 구체적 정책내용들에 있어서는 획기적인 변화의 측면들이 있었음은 사실이다.

이번 정부안을 발표하면서 농발위가 건의한 129개 항목 114개 항은 시책화했고 15개 항은 그 취지를 반영했다고 한다. 이렇게 산술적으로 볼 때는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스러운 것은 농업정책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개혁적 변화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농업정책의 기본임무와 목표가 국민식량의 자급에 있다면 이번 발표안에는 자급 목표의 제시가 미약했고, (2)농지제도의 구체적 대책 미비로 비농업진흥지역 농지의 소멸과 부동산 투기가 염려된다. (3)또한 농협을 비롯한 협동조합의 개혁이 유명무실하게 끝날 가능성이 있으며, (4)농수축산물의 가격과 유통정책이 부족하다. 이외에도 (5)농업개혁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농업관련 행정기관의 개편이 없다는 점과, (6)농어촌의 의료보험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데에 대하여 우려와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들을 개혁하지 못하는 것은 기존의 이해당사자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끈질긴 작용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개혁대상이 개혁주체가 되게 되니 현실적 어려움을 이유로 변화를 기피하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에서 농정개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번 농정개혁에서 잘 안되고 있는 큰 과제들도 계속 개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농협, 수협, 축협 등 협동조합의 개혁을 위하여 협동조합 전문학자, 농민단체, 협동조합 당사자들이 협동조합개혁추진위원회를 만들어 협동조합의 개혁입법안을 만들고 이를 관철하게 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듯이 앞으로 계속적인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이번에 발표한 농정개혁안은 대략의 큰 항목만 발표했기 때문에 그 구체적 정책시행



이 우 재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장)

□ 필자 약력

- 서울대 총학생회장(4.19 당시)
- 크리스찬아카데미사건으로 옥고
- 전국 학술단체협의회 공동대표
- 민중당 상임대표
- 농어촌발전위원회 위원(현)
-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소장(현)
- 한우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장(현)

내용을 채우는 과정에 각 농민단체와 농어민 전문가들이 구체적 정책내용들을 계속 연구하고 실천을 위하여 함께 노력해야 한다.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좋든 싫든 한국농업의 나아갈 길은 농업과 농민이 살아남기 위한 전업농 형태의 대농경영을 농업구조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품목별 전업농 생산자조직이 생산, 유통, 가공사업까지 계열화하여 국내 도시노동자 및 비농업종사자들의 소득수준으로 소득을 향상시키고 국제시장에서는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강화해 보자는 것이다. 때문에 앞으로 농정은 농촌에 남아서 전문 농업경영자로서 전업농을 하는 개인이나 농업조직의 정책적 지원을 하는 것을 기본정책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는 농촌에 남아서 농사를 지을 전문 농업경영자만이 농업에 종사하게 될 것이다. 때문에 농업의 지속을 위하여 전문 농업경영 주체인력의 육성이 최대의 과제이다. 그리고 농촌정책의 기본방향은 농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경제적 소득증대에 앞서 교육, 문화적으로 도시 생활과 손색없는 생활 환경, 문화·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도농통합형 지역개발에 치중할 것이다. 때문에 앞으로의 정부투 용자도 지역개발, 전업농 육성, 농업경쟁력 강화의 측면에 정책적 관심이 집중될 것이다. 이제까지의 많은 농업정책들이 다 실패로 돌아간 것은 일차적으로 정책 당국자들의 책임도 있지만 농민들도 자기 스스로를 돌볼 필요가 있다. 이번에 농발위를 구성하고 농정개혁안을 만들었듯이, 이후에는 농정감시기구도 구성하여 개혁농정이 퇴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과거 권위주의시대와 문민시대의 다른 면은 농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에 의하여 주인노릇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축산농민들 역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축산정책의 올바른 수립에 일익을 담당하고, 환경보존형 축산이 장려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양돈 축사 개량문제와 부가가치세 면세문제도 축산 농가들의 노력속에서 사정은 변할 수 있다고 본다.

우리 스스로가 강력한 농업개혁의지를 갖고 행동과 실천을 통하여 개혁을 추진하고 참여한다면 대통령과 농민들의 개혁의지가 일선 실무자들에 의하여 퇴색, 변질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농업개혁은 책임있는 농민들의 힘찬 의지와 실천에 달려 있다. 양돈농민이 앞장서 농업개혁에 참여하자. **필자**